

한국경제, ‘선진국 함정’ 경계해야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1. 서론

세계경제는 2014년 새해에 들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가 세 차례 시도된 후, 이제부터 양적완화가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안에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완화의 축소에 대한 소문은 작년 6월부터 있었으며, 그 때문에 신흥국들은 채권가격 급락과 외국자본유출로 금융시장이 몇 차례 출렁거렸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양적완화 축소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는 다소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확실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경제는 새해 들어 다행히 성장 엔진이 다시 가동될 기미가 보인다. 작년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이 2.8%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2%를 훨씬 뛰어 넘은 성장률이다. 올해 성장률은 3.7%가 될 것이라고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3.7% 성장률이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3.7% 성장률이 실제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예측기관도 있다.

한국은 1962~96년 동안 연평균 7.5%를 성장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기반이 무너졌고, 그 후로부터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다. 성장률이 2001~2007년에는 4.7%, 2008~2011년에는 3.2%, 2012년에는 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3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1979. 10. 26) 다음 해인 1980년 마이너스(-) 3% 성장했으며, 외환위기 해인 1998년 역시 마이너스(-) 5.7%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겨우 0.3% 성장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국이 저성장 함정(Low-Growth Trap)에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고성장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별로 없다. 아직까지 한국의 적정 성장률에 대한 합의는 없으나, 지금처럼 2~3% 성장률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경제의 지속적 저성장 상황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으로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World Bank 분류에 따르면, 중진국 함정이 적용되는 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006~\$12,275 범위에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5,000달러가 넘었으며,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00달러가 넘는다. 따라서 한국은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인가. 이것 또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단순히 소득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중진국 함정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선진국 함정’이란 개념을 한국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학계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던 중진국 함정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 후, 한국 경제가 과연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미 빠져 있는지 진단하고, 혹시 한국경제가 지금 ‘선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를 피해갈 길을, 그러나 이미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면, 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여기서 ‘함정(陷井)’이란 뜻은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하여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를 가리키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은 한 번 빠지면 빠져 나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정의하는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잃고, 고소득 국가(High-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소득 국가에 머무르거나 저소득 국가(Low-Income Country)로 후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2012년 6월 현재 세계은행이 정한 중진국 소득범위는 1인당 소득이 미국달러 기준으로 \$1,006~\$12,275이다. \$1,005이하 국가는 후진국이다. 중진국은 다시 소득구간에 따라서 \$1,006~\$3,975 소득국가는 하위 중진국, \$3,976~\$12,275 소득국가는 고위 중진국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진국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투자비율(투자/GDP)이 매우 낮다. 둘째, GDP 성장률이 저조하다. 셋째, 산업의 다양성(industrial diversification)이 제한적이다. 넷째,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다. 20세기 초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됐던 일본, 뉴질랜드, 호주, 서유럽, 북미를 제외하고 중진국 함정을 탈피한 나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이다. 후진국에서 정치적인 의지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중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국이 통제하기 아주 어려운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탈출에 걸림돌이 되는 내부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외부요인으로서 구체적인 세 가지 외부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요인으로서 해당 중진국은 선진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방어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시장에서 기존의 선진국과 기술경쟁을 해야 한다. 기존 선진국도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진국의 산업기술이 선진국을 따라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외부요인은 자국경제 밖에서 충격을 주는 지역경제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당시 중진국이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을 강타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강타하였다. 한번 이런 충격을 받으면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내부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제적 요인인데, 국내 요소가격의 급등이다. 중진국이 되면서 임금을 포함한 생산비용이 급등하여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우, 중진국이 되었다가도 다시 저소득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두 번째도 경제적 요인으로, 수출 장려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 특히 수출 대기업은 큰 이익을 남기게 되나 중소기업이나 소시민들은 별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산층이 위축되고 소득의 양극화로 소득분배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산업경쟁력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순서를 밟아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 내부요인으로서 비경제 요인이 있다, 국내 정치요인으로서 정치체제요인을 손꼽을 수 있다. 1인당 소득은 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값에 불과하다. 총소득의 대부분을 왕족이나 특권층이 소유하는 경우, 노동자가 일정 소득을 소유하면 더 이상 노동할 동기가 없어진다. 왕권주의나 공산체제가 아닌 시장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성장 파이(pie)'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저성장과 실업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중진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짐으로써 다시 후진국으로 뒷걸음치게 된다.

3. '선진국 함정'에 빠진 서방 선진국

개도국이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 중진국이 될 수는 있으나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 다시 개도국 지위로 내려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진국에서 성장을 계속하여 선진국이 될 수 있어도 상황이 달라지면 '선진국 함정'에 빠져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으나 빠져 나올 수 없으면 다시 중진국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20세기 들어 기존의 선진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진 상황이 발생했다. 1929년 미국이 먼저 '선진국 함정'에 빠져 세계대공황을 야기했다. 미국의 경제 불황이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대량 실업을 몰고 왔다. 이것은 바로 유럽경제를 마비시켰으며 이로써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 때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가 일어나 정부의 공공투자를 주장하여 결국 미국과 유럽을 회생시켰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멈춘 상태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제공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케인스는 주장하였다.

21세기 직후 2008년 미국의 Lehman Brothers 투자은행의 파산과 함께 대형 금융기관이 차례로 쓰러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만일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경제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비상수단을 동원하였다. 미 달러를 무제한 방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적완화를 5년 동안 세 차례 실시하였으며, 다행히 이러한 조치는 효과를 보여 미국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럽 경제가 크게 몸살을 앓았으며 아직도 몸이 약해 힘을 잘 못 쓰고 있다. 미국 경제의 약화와 글로벌 경제 불황이 경제체질이 약한 남유럽 5개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을 강타하였다. 17개 유럽국이 1999년 euro라는 단일 통화로 통화통합을 함으로써 회원국은 독자적인 재정정책은 있어도 금융정책이 없게 되었다. 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정책에 과하게 의존하다보니 유럽, 특히 남유럽 5개국의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중앙은행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니 이들은 지금 지독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들 국가야 말로 선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다.

상기 남유럽 5개국은 모두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다. 현재 OECD 회원 국가는 총 34개국이다. 가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GDP의 일정비율을 개도국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한국도 회원국이다. 참고로 이들 34개국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일본,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 그리스,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칠레, 폴란드, 헝가리, 터키, 멕시코이다.

설혹 한국처럼 1인당 소득이 중진국 범위를 넘어서 OECD 국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글로벌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남유럽 5개국은 이미 '선진국 함정'에 확실하게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OECD 선진국도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면, 중진국 또는 개도국(개발도상국)까지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선진국 함정' 위험을 맞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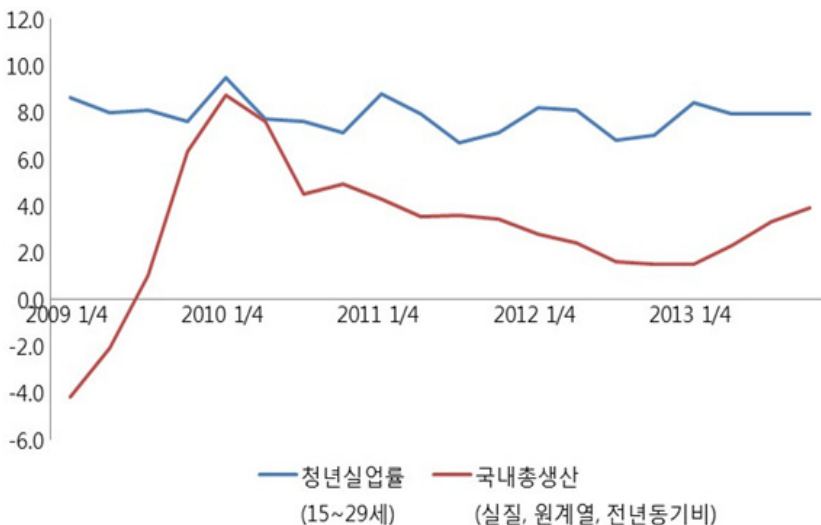
'선진국 함정'은 한국과 같이 소득기준으로 보면 중진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국가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低 성장률과 高 실업률로 고통 받는 상황을 가리킨다. 2013년 12월 말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25,000달러가 넘는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하면 30,000달러가 넘는다. 이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다. G-20의 일원이고 세계 7위 수출국이며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다. 1996년 한국이 OECD 선진국 클럽 회원국이 되었으니 공식적으로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고 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 성장률은 세계 평균성장률을 밑돌 정도로 저 성장률이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연말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6.3% 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 3.7%로 급강하했으며 이어서 2012년에는 2.0% 바닥을 내리쳤다. 다행히 작년 2013년에 2.8%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14년 GDP 성장률은 3.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경제 예측기관들의 201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하면 3.7%~3.9% 범위가 된다.

우리나라 실업문제도 근년에 들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15~29세의 청년이 겪는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들만 해도 매년 30~40만 명이 신규노동자로 노동시장에 나오는데 이들의 절반도 직장을 얻지 못 하고 있다. 이들 청년 실업자들은 매년 누적 되고 있어 앞으로 크게 사회 문제가 될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과연 '선진국 함정'에 빠졌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과거 30~40년 GDP 성장률을 살펴 보자. 한국은 19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 기간 동안 모두 여섯 차례 5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하였다. 1차(1962~66년) 기간의 5년 평균 GDP 성장률은 7.8%이었다. 2차(1967~71년) 기간의 평균 GDP 성장률은 9.6% 이었고, 3차(1972~76년) 기간의 성장률은 9.2% 이었다. 4차(1977~81년) 기간의 평균 성장률은 5.8% 수준으로 급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피살과 1980년 농산물 흉작 때문이었다. 5차(1982~86년) 기간에는 평균 GDP 성장률이 9.8%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6차(1987~91년) 기간의 평균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림 1> 분기별 GDP 성장률과 청년실업률



<표 1> 분기별 GDP 성장률과 청년실업률

분기	실업률 (15~29세)	국내총생산 (실질, 원계열, 전년동기비)
2009 1/4	8.6	-4.2
2009 2/4	8.0	-2.1
2009 3/4	8.1	1.0
2009 4/4	7.6	6.3
2010 1/4	9.5	8.7
2010 2/4	7.7	7.6
2010 3/4	7.6	4.5
2010 4/4	7.1	4.9
2011 1/4	8.8	4.3
2011 2/4	7.9	3.5
2011 3/4	6.7	3.6
2011 4/4	7.1	3.4
2012 1/4	8.2	2.8
2012 2/4	8.1	2.4
2012 3/4	6.8	1.6
2012 4/4	7.0	1.5
2013 1/4	8.4	1.5
2013 2/4	7.9	2.3
2013 3/4	7.9	3.3
2013 4/4	7.9	3.9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런데 지난 4~5년 간 한국의 GDP 성장률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다. <표 1>의 실업률 자료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2010년 1/4분기에 9.5%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금은 7.9%인데 이것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률은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꿈과 젊음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국내에서 할 일이 없다면 뭔가 잘 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표 1>은 전년 동기비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2009년 1/4 분기 성장률은 -4.2% 기록하였다가 1년 후에는 8.7% 수준으로 급상승 하였다. 그러다 다시 1년 후 2011년 1/4 분기 때는 4.3% 수준으로 폭락했다. 그 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2012년 1/4 분기에 2.8%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2013년 1/4 분기에는 1.5% 바닥 수준까지 내려갔다. 다행히 다시 성장세가 회복되어 2013년 4/4분기에는 3.9% 수준까지 올라갔다. 2014년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과연 4% 성장률 벽을 넘어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림 1>은 분기별 GDP 청년실업률과 GDP 성장률 추이를 선으로 보여준다. 청년 실업률은 8% 선에서, GDP 성장률은 4% 이하 수준에서 굳혀지는 듯이 보인다. <그림 1>과 <표 1>은 한국이 지금 상위소득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저성장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5. 신뢰회복으로 ‘선진국 함정’을 예방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왔다. 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해옴으로써 지금의 경제과실을 누리고 있다. 지난 2~3년간 2%대의 저 성장률을 계속하였으나 자동차, 선박, 반도체, 전자, 철강 산업분야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경쟁력강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정부 투자도 필요하지만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앞에서 지적 된 바와 같이 소득만 높다고 자동적으로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 경제이외 문화, 사회, 정치 각 분야에도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한국은 부패를 나타내는 지수가 높다. 1인당 GDP \$40,00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8개국 평균 투명지수는 8 이지만 한국의 투명지수는 5.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이 앞으로 부패수준을 내리고 투명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호불신이 팽배해 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공정한 기회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저성장 함정 또는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신뢰하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면 경제전망도 밝아져서 투자가 촉진되고 그러면 기업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실업문제도 많이 해소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것은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한국경제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음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신뢰와 자신감을 잃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자본자유화 정책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시실 따지고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모두 정부관료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책이 완벽했으면 외부충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겠지만 완벽한 대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고치고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자본자유화의 단점이 장점보다 큰 것으로 판명된다면 자본자유화도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자본자유화 속도를 국내 금융시스템과 금융안전망이 성숙되는 속도에 맞춘다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크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상호신뢰가 필요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의 회복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과 야당 간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도 따지고 보면 외환 및 금융위기와 정책대응의 실패와 관계가 깊다.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대량실업과 자산차압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꾸어 버렸다. 기존의 여당 세력이 야당으로 전락했으며 새 여당은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중에는 성공한 개혁도 있었으나 실패한 개혁도 많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정치판도는 또 한 번 바뀌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는 그만큼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제는 그만큼 퇴보했다. 여당과 야당의 의원 수가 비슷하다보니 경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가 없다. 양당 간의 불신 때문에 의안 통과를 위한 양당 간 협상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협력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지만 양당이 각을 세워 밀고 당기고 하는 대결 과정에서 연말까지 법안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은 이제라도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민생법안만은 빨리 통과되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정치도 페어플레이(fair play) 자세로 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책 경쟁을 통하여 정권이 교체된다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리고 GDP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도 지금보다 많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이 아시아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을 받지 않고 또한 여야 간의 협조도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선진국 함정’에 안 빠질까? 그렇지 않다. 한국을 ‘선진국 함정’에 빠뜨리게 할 위험한 걸림돌이 또 있다. 지금 위험수준에 닿은 사회적 불신이다.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려면 법 준수만으로 부족하다. 법과 질서는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페어플레이가 보편화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공정한 기회가 보편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저성장 함정 또는 ‘선진국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신뢰하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면 경제전망도 밝아져서 투자가 촉진된다. 그러면 기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실업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끝)

■ 참고문헌

파이낸스투데이,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2013년 2월 18일.

한국경제TV, “한국경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2013년 8월 14일.

Eichengreen, Barry, “Escaping the Middle-Income Trap,”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ww.kc.frb.org/

..., 2011.

Alejandro Foxley and Fernando Sossdorf, *Making the Transition from Middle-Income to Advanced Economies*, The Carnegie Papers, International Economics, Sep. 2011.

Pierre-Richard Agenor, Canuto Otaviano, and Michael Jelenic, "Avoiding Middle-Income Growth Traps," Economic Premise, The World Bank, November 2012.

Sally Razeen, "Asia and the Middle-Income Trap," appeared in the Autumn 2013 edition of EA magazine.

Shekhar Aiyar, Romain Duval, Damien Puy, Yqun Wu, and Longmei Zhang, "Growth Slowdowns and the Middle-Income Trap," IMF Working Paper, March 2013.